

신기술 친환경 인증제품 구매촉진, 신호탄이 올랐다

산자부, 공공기관·대기업과 신기술·친환경 인증제품 구매촉진 협약 체결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친환경 인증제품이 영업력과 홍보 부족 등으로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대기업이 함께 발벗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R&D 사업화 성공률이 미국의 1/20, 일본의 1/9, 독일의 1/3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신기술 인증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한마당 큰잔치인 “2006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가 11월 14일(화) 16:00부터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금년 10돌을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신기술 인증제품의 실용화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공공기관·민간대기업 등 주요 구매기관간에 인증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통령도 신기술 인증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대기업에서도 인증제품 구매 협력을 요청하였다.('06.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구매 촉진 협약은 인증제품 생산기업이 추천한 40여개 주요 구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광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 6개 공공기관·민간대기업 대표가 구매기관을 대표하여 산업자원부 차관과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이외에도 민간대기업이 다수 참석함에 따라 그간 공공기관 위주로 시행되던 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가 민간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구매기관의 구매책임자와 인증제품 생산기업 대표간에 별도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 인증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촉진대회에 참석한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은 “앞으로, 신기술 인증제품의 사업화에 노력하여 이들 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추가 되어 질 좋은 성장을 주도해 나가야 될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호주 사업화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Commercialization)에 분석에 따르면, 사업화 성공률을 2배로 높이면 장기적으로 혁신형 기업의 창업은 연평균 2배, 기업매출 9배, 고용 8배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국회 산업자원의 수장인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신기술 인증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증제품의 실용화와 구매 촉진에 기여한 66개 유공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도 있었는데, 수상자 중 90%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밸브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헌신해 온 (주)화성의 장병호 회장이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을, 수성도료분야 기술력 강화에 공헌이 큰 (주)아해의 김성훈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적층모션배선반’을 개발한 (주)베스텍 등 8개 유공기업과 유공자가 대통령표창을, ‘소음감지 및 원격관리 구내 자동방송장치’를 개발한 일신전자통신(주) 등 9개 유공기업과 유공자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